



인도 예산안(Union Budget) 25/26:

새로운 예산안이 인도 내 다국적 기업(MNC)에 미치는 영향

Feb 2025



서문

2025년 2월 1일, 인도 모디 정부 3기 정책이 본격 반영된 '25/26 회계연도 연방 예산(Union Budget)' 발표가 있었습니다. 'Vikas Bharat(발전된 인도)'의 비전을 향해, 정부는 농업, 중소기업, 투자, 수출을 인도 경제의 '4대 엔진'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료'로 개혁을, 포용성을 '핵심정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제조업 촉진, 'Make in India'의 발전, 고용 중심 개발 촉진, 사람과 경제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에너지 공급 확보, 수출 촉진, 혁신 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세금, 전력 부문, 도시 개발, 광업, 금융 부문 및 규제 개혁 등 6개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개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간소화된 세법을 도입할 계획으로, 그 초안이 며칠 내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세금 제안의 다른 주요 주제는 국내 제조업과 가치 추가 지원, 수출 촉진, 자발적 준수 장려, 비즈니스 편의성 증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Pillar-Two 규칙 도입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글로벌 세제 개편을 일단 지켜 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산 제안은 2월 1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적절한 논의 및 토론 후, 예산은 의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법률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많은 세금 개정과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MNC)으로서 인도 내 제3자 고객과의 비즈니스나 인도에 있는 자회사 및 지사와의 거래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 및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였습니다.

※ PwC 영어 원문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와의 비즈니스

세율

외국 및 인도 기업에 대한 세율 변경 없음: 외국 및 인도 기업에 대한 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율

제안된 관세율 변경은 'Make in India'(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현지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인도 내 제조를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에는 관세 감면을 적용하고, 완제품 수입에는 관세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 관세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및 휴대전화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자본재
-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 반도체 장치 및 태양광 전지
- 생명구제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또한, 관세율 체계 개편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까지 인도의 관세율 구조는 22개 세율 구간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연방 예산안에서 14개로 축소되었고, 이번 개편을 통해 8개 세율 구간으로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관세 조정 정책은 단순히 인도 내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를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소화된 세법 도입 예정

인도의 현행 세법은 1961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주로 1922년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의 세법은 총 23개 장, 298개 조항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법률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인 틀은 거의 한 세기 전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개정으로 인해 세법이 복잡해졌고, 명확성이 부족하여 법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조세 소송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직접세법(DTC, Direct Tax Code)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재무장관이 DTC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8월에 DTC 초안이 공개되어 대중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2017년, 모디 정부는 DTC 논의를 다시 활성화하며, 새로운 직접세법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2019년 조세 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연례 예산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법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 개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7월, 모디 정부 3기 첫 예산안에서 새로운 세법이 6개월 내 발표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은 어제 예산안 연설에서 조만간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새로운 DTC는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법의 절반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장(章) 수와 법 조문의 양도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 행정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확실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조세 소송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한다면, 이는 단순하고 투명한 세법을 마련하는 대담한 개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해당 초안은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 전자 제조업 부문에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추정 세금 제도

인도는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대규모 전자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 계획,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 지원, 설계연계 인센티브(DLI) 등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가 인도 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정 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의 25%를 과세 대상 이익으로 간주하며, 실질 세율은 총 수입의 8.75% (활증세 및 기타 세금 포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선택한 비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미사용 감가상각비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 인력 제공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현재 초안에는 몇 가지 명확한 입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제공된"이라는 문구가 해외에서 제공된 서비스나 기술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과 "수령했거나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간의 중복 계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장관은 특정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인도에서 부품을 보관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이프하버(Safe Harbour)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무역 촉진

임시 평가의 기한 설정

인도 관세법은 특정 상황에서, 수입 화물에 대해 잠정 평가(Provisional assessment)를 허용하지만, 이를 종료하거나 최종 확정하는 데 명확한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예산에서는 원칙적으로 2년(최대 3년)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도록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보류 중인 평가도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통관 후 주요 사실의 자발적 신고 제도

정부는 세관 통관 후 수입 및 수출 신고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추가 관세 납부나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처벌 조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신뢰 기반 과세 체계(Trust-based taxation regime)의 일환입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관련 준수 절차 간소화 및 확실성 제공

다년간 세무조사(Block Audit) 제도 도입

현재 매년 진행되는 TP 세무조사 대신, 3년 주기의 TP 세무조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다년간 이전가격(Arm's length price)을 일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년간 TP 세무조사를 선택하는 절차, 방식 및 기한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번 합리화 조치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 모두의 준수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세이프하버 확대

기존의 세이프하버 규정은 제한적이고 높은 마진 요건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기존 세이프하버 범위를 확장하여, TP 분쟁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분쟁이 적은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인도에 대한 투자 유치

GIFT IFSC에 대한 인센티브: 게임 체인저

인도 정부는 GIFT 국제 금융 서비스 센터(GIFT IFSC)를 강화하여 인도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매 펀드(Retail funds), 보험, 선박 리스, 재무 본부(Treasury Centre) 등 금융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규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FSC 내 글로벌 재무 본부(GTC) 관련 '의제 배당(Deemed Dividend)' 규정 완화

현재, 비상장 기업이 주주나 그룹 계열사에 대출 또는 선금금을 제공하면 '의제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IFSC 내 글로벌 재무 본부와 상장 외국 모기업 간의 대출을 의제 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IFSC에서 재무 기능을 운영하는 매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법률에 명시된 일몰 조항 기한 연장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는 국제 금융 서비스 센터(IFSC)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특정 일몰 조항(Sunset clause)의 적용을 받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IFSC 내 사업 개시 기한을 203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운(Shipping) 및 보험(Insurance)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베일을 벗은 '새로운 인도'의 비전

| 주제 | 주요 내용 |
|--|---|
| 스타트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기존 펀드 오브 펀드(FoF; Fund of Fund) 확장, 추가 1억 루피 투입 계획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펀드 신설 스타트업 세금 감면 혜택 5년 연장 |
| 글로벌 역량 센터 (GCCs; Global Capability Cent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역량 센터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인재 공급 및 인프라 확충, 규제 개혁, 정부와 산업 간 협력 강화 등 특히 2급 도시(Tier-2 cities)의 경제 발전 촉진 및 인구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Make in India 및 제조업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ke in India'를 강화하고,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전환하는 국가 제조업 미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프레임워크, 실행 로드맵 수립, 기술 혁신 촉진 등을 포함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인력 양성, 중소기업 성장 촉진, 첨단기술 보급, 고품질 제품 생산 보장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실행 |
| 클린테크 (CleanTech) 제조업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eanTech 제조업 육성을 핵심 우선순위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친환경 정책 강화: National Solar Mission, National Electric Mobility Mission Plan, National Clean Energy Fund, PLI(Production-Linked Incentive) 등 태양광 PV 셀, EV 배터리, 수소, 풍력, 대규모 에너지 저장 배터리 등 생산을 적극 지원 |
| M&A 절차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M&A 절차에 대해, Fast-Track 합병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M&A 승인 및 통합 과정 신속화 (법적 행정적 지원) |
| 규제 개혁 및 글로벌 투자 유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금융 부문 규제 개혁 위원회 신설 보험 산업 FDI 상한선 100% 확대 방안 제시 인도를 글로벌 완구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발표 |

결론 및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언

모디 정부 3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본 예산안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인도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포괄적 개발 및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의 복잡한 세금 정책을 보다 간소화, 명확화하여,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제조업, 금융 서비스, 스타트업 등의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도는 더욱 빠르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의 2025-2026 연방 예산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인도의 새로운 간소화된 세법 도입에 따라 세금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법 변화가 비즈니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비거주자 대상 추정 과세 제도를 구체적인 사례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Make in India' 캠페인과 제조업 지원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인도 내 제조 및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현지화 전략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클린테크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해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및 딥테크 분야 육성 정책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정책은 한국 및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수용하고,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ppendix. 인도 연방 예산(Union Budget 2025-26) Highlight

1. 국가 발전의 여정 (Journey of Development)

- 핵심 성장 동력: 농업(Agriculture), 중소기업(MSME), 투자(Investment), 수출(Exports)
- 목표: Viksit Bharat(발전된 인도) 달성, 개혁(Reforms)과 포용성(Inclusivity) 기반 경제 성장

2. 주요 경제 개발 정책

① 농업 및 농촌 발전

- 총리 농업 발전 계획 (1.7천만 농민 지원)
- 농업 신용 확대 (KCC 대출 한도 ₹5 Lakh)
- 고수확 종자 미션 (기후 변화 대응, 병충해 저항성 종자 개발)
- 목화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강화)
- 마카나(Makhana) 산업 발전 (비하르 지역 가공·마케팅 지원)
- 자립형 콩류 생산 미션 (단백질 함량 증가 및 생산성 향상)

② 중소기업(MSME) 및 'Make in India' 지원

- 소규모 기업 맞춤형 신용카드 (Udyam 포털 등록 기업 대상 ₹5 Lakh 한도 제공)
- 신규 창업자 지원 (SC/ST 포함 5 Lakh 명 대상 최대 ₹2 Crore 대출)
- 노동집약 산업 지원: 신발·가죽 산업 육성 (22 Lakh 일자리 창출), 완구산업 개발 (지속 가능한 완구 제조), 식품 가공 산업 지원 (비하르 국립식품기술연구소 설립)

③ 사람·경제·혁신 투자

- 교육·의료 발전:
 - IIT 정원 확대
 - AI 교육 센터 설립 (₹500 Crore 투자)
 - 초·중등학교 및 의료기관 광대역 연결 확대
 - 의료 교육 확충 (향후 5년간 75,000개 의대 정원 추가)
 -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복지 강화 (e-Shram 포털 등록 및 의료보험 지원)

3.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개혁

- 인프라 투자: ₹1.5 Lakh Crore 예산 투입, 주정부에 50년 무이자 대출 제공
- Jal Jeevan Mission: 2028년까지 100% 식수 공급 목표
- 전력 부문 개혁: 송전망 강화 및 개혁 추진
-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신규 원전 개발
- UDAN 프로그램: 지역 항공 네트워크 확장 (120개 신규 목적지, 4 Crore 승객 수송 목표)
- 관광산업 발전: 50개 주요 관광지 개발 및 전자비자(e-Visa) 절차 간소화

4. 수출 촉진 및 무역 활성화

- 수출 진흥 정책: 중소기업(MSME) 대상 수출 지원 및 무역 금융 활성화
- BharatTradeNet: 글로벌 공급망과의 통합을 위한 디지털 무역 인프라 구축
- GCC(글로벌 역량 센터) 육성: 2·3선 도시에서 GCC 설립 촉진

5. 세제 개혁 (Tax Reforms)

| 직접세(Direct Tax) 개혁 | 간접세(Indirect Tax) 개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구간별 세율 조정 (5% ~ 30%) 중산층 세 부담 완화 TDS/TCS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공제 한도 증가 (₹50,000 → ₹1 Lakh) 임대료 관련 연간 TDS 한도 ₹6 Lakh로 확대 자발적 세금 신고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 신고 기간 기존 2년 → 4년 연장 세무 행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신탁·기관 등록 기간 5년→10년 확대 2개의 자가 점유 주택 공제 허용 (기존 1개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구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필요한 7개 관세율 폐지 개별 품목별 세율 유지 및 일부 조정 산업별 세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LCD TV, 섬유 산업, 전기차(EV) 배터리 관세 면제 조선업 및 항공기 수리(MRO) 관련 세금 면제 전통 공예·가죽 산업 수출 지원 |

6. 정부 재정 운영 (Public Finance)

| 국가 재원 (Rupee Comes From) | 국가 지출 (Rupee Goes To) | |
|--------------------------|-----------------------|------------------|
| 정부 수입 비율 | 정부 지출 항목 | |
| 차입 및 기타 부채 | 24% | 이자 지급 20% |
| 법인세 | 17% | 중앙정부 계획 16% |
| 소득세 | 22% | 국방비 8% |
| GST 및 기타 세금 | 18% | 주요 보조금 6% |
| 수입관세 | 4% | 주정부 세금·관세 분배 22% |
| 비과세 수입 | 9% | 연금 4% |

주요 부문별 예산 배정 (Expenditure of Major Items, ₹ Crore)

| | |
|--|-----------------|
| 국방 (Defence) | ₹4,91,732 Crore |
| 농업 및 연관 활동 (Agriculture & Allied Activities) | ₹1,71,437 Crore |
| 교육 (Education) | ₹1,28,650 Crore |
| 보건 (Health) | ₹98,311 Crore |
| 도시 개발 (Urban Development) | ₹96,777 Crore |
| IT 및 통신 (IT & Telecom) | ₹95,298 Crore |
| 에너지 (Energy) | ₹81,174 Crore |
| 상업 및 산업 (Commerce & Industry) | ₹65,553 Crore |
| 사회 복지 (Social Welfare) | ₹60,052 Crore |
| 과학 부문 (Scientific Departments) | ₹55,679 Crore |

7. 결론

이번 인도 연방 예산 2025-26은 경제 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중심으로 하며,

- 농업, 중소기업, 교육, 기술,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디지털 경제, AI 교육,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의 혁신 강조
-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및 규제 개혁
-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인프라 개발 촉진

이 모든 정책이 Viksit Bharat(발전된 인도)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

Contact Us

| Samil PwC

박인대 Partner | Tax
in-dae.park@pwc.com

정민우 Partner | Assurance
min-woo.jung@pwc.com

| PwC India

김규진 Director | KBD
kyujin.kim@pwc.com

안종현 Manager | KBD
jonghyun.ahn@pwc.com

삼일PwC 인도 비즈니스 센터

삼일PwC 인도 비즈니스 센터는 인도 시장에 대한 전문성 있는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wC India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인도 현지에 전담 인력 파견을 통해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 관련 회계/세무 자문, 투자 자문, 전략 자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통합 자문 서비스

인도 시장 진출 전략(Location Study, 사업 타당성 검토 등 포함), 인도 M&A·투자·JV설립 자문, 인도 IPO 자문, 인도 투자 인센티브·관세 등 세무대응 전략 자문

• 삼일PwC 인도 비즈니스 전문가

유원석 Leader
 Partner | PwC컨설팅

정민우
 Partner | Assurance

정기욱
 Partner | Assurance

박인대
 Partner | Tax

김현준
 Director | Tax

이회림
 Partner | Deals

강대호
 Partner | Deals

김병일
 Partner | Public Sector

윤두오
 Partner | PwC컨설팅

김규진
 Director | KBD

• One Team with PwC India

PwC India는 인도 8개 도시(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챘나이, 콜카타, 하이데라바드, 푸네, 아마다바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약 30,000명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Inbound/ Outbound Services
- Korea Business Desk (한국 전담팀)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